

“재정·미충원 ‘각자도생’ 하라는 것”… 교육개혁 비판 쇄도

학령인구 감소… 대학 위기 본격화
수시모집 경쟁률 6대1 미만 대학 85%가 ‘비수도권’ 사실상 ‘미달’
교육개혁, 지방대 살리기와 상충
“대학위기 방관, 몰락까지 갈수도”



전국대학생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23 교육개혁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들의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각자도생’식의 개혁을 추진해 우려를 사고 있다. ‘지방대학 살리기’가 국정과제임에도 수도권대학 중심 정책만 펼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2023 교육개혁’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다.

16일 대학가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수시모집을 살펴보면 경쟁률 6대1 미만 대학 중 85%가 비수도권으로 집계됐다. 수시는 최대 6개 대학까지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률 6대1 미만을 사실상 미달로 간주된다. 지역별 격차는 2021학년도 수도권대 12.91대1·지방대 5.67대1, 2022학년도 수도권대 13.95대1·지방대 6.04대1, 2023학년도 수도권대 14.33대1·지방대

5.72대1로 꾸준히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전체 경쟁률 역시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정부 차원의 관리를 축소하면서 책임을 방기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5일 규제완화, 지자체에 대학 권한 이양,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골자로 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라는 최대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이번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내용이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평가 폐지, 4대 요건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과감한 교육 개혁을 타이틀로 세웠지만 오히려 국정과제인 ‘지방대학 살리기’와 상충되는 기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지방대학 권한 이양 역시 지역별 단극을 벌리기 때문에 지방대의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업무보고는 전반적으로 대학에게 재정 문제와 미충원을 스스로 해결하라

는 각자도생 주문으로 보인다”며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간의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 대학이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말은 사실상 대학 위기 방관, 심지어는 몰락까지도 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정과제를 ‘지방대학 시대’로 잡기는 했지만 사실상 정책은 수도권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차원의 관리·조정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지방대학이 규제 완화를 통해 사실상 뒷전이 된 상황이다.

교육계에서는 고등교육의 최대 위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자율 구조를 통한 책임 방기라는 지적이 지속되면서 정부 차원의 대학 구조조정, 관리 방침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6일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다수의 사회 단체들도 공동 성명서를 내고 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수도권 대학만의 혜택을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이며 수도권·비수도권대학의 첨단학과 격차가 심화될 것이 자명하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지방대학살리기 정

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고등교육계는 공통적으로 정부의 지원 없이 지방대학소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개별 대학 단위의 관리가 아닌 수도권 집중 억제·해소의 노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에서부터 주목된다. 앞서 김영삼정부 시기 대학설립자율화를 표방한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되면서 사립대학들이 우후죽순 들어섰고,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평가 체제가 더해지면서 대학을 경쟁으로 몰아넣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임 연구원은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지방대학에서 개별적으로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뿐더러, 정부 정책 과오에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과 교수는 “지방대학 위기의 본질적인 이유는 주변 지역 일자리 부족에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와의 협업 사업을 통해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초·중·고 학생 메타버스 기반 심리상담

서울시교육청, 총 216명 시범사업
위센터 전문상담사가 4~6회 상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겨울방학을 맞이해 1월부터 2월까지 초·중·고등학교 학생 216명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기반 심리상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동안 대면상담을 주저해 심리정서 위기지원을 적시에 받지 못했던 학생들을 위해 상담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상담 진행은 아바타언터가 개발한 메타버스 심리상담 플랫폼 ‘메타포레스트’ 프로그램을 활용해 이뤄진다.

전체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으로 참가자 모집을 안내한 결과,

600여명의 학생들이 신청해 큰 호응을 보여 줬다. 이 중, 사전 절차를 거쳐 선정된 216명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 24개 직영 위(Wee) 센터 전문상담(교)사가 겨울방학 동안 4~6회기씩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메타버스 심리상담 플랫폼은 아바타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상공간으로 실시간 표정인식(Emotion Recognition) 기능을 탑재해 사용자의 표정을 이해하는 아바타를 구현함으로써 공간 제약과 VR 장비 없이도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전화·채팅 상담보다는 유대감 및 애착 형성에 용이하고 화상상담보다 높은 수준의 익명성이 보장돼 상담 접근성이 뛰어나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토대로 2023년 말 운영 예정인 ‘서울 위(Wee) 프로젝트 통합 플랫폼’에 비대면 상담 및 블렌디드 상담 안착을 위해 메타버스 심리상담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위기학생을 다각도로 밀착 지원하고, 학생·학부모 수요자의 상담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상담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많은 학생들이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익명성이 보장된 가상공간을 적극활용함으로써, 상담이 더 많이 활성화 돼 서울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인 지난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염리초등학교에서 입학 앞둔 어린이들이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초등학교 입학예정자 5만4622명 ‘소폭증가’

서울시교육청, 신입생 예비소집 결과

대상자 6만6324명을 대상으로 564개교(휴교 3교 제외)에서 실시했다.

새학기에 앞서 서울 초등학교들이 예비소집을 진행한 결과, 올해 최종 입학 예정자는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대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2023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취학

대상자 6만6324명을 대상으로 564개교(휴교 3교 제외)에서 실시했다. 12일 집계 기준으로 취학대상자 6만6324명 중 취학통지자는 총 6만1554명이었으며, 그 중 5만3704명이 예비소집에 참석했다. 추가 입학희망자 918명을 포함해 최종입학예정자는 총 5만4622명으로 예비소집 참석자 대비 최종입학 예정자는 87.2%로 전년대비 0.4%p 증가했다. /신하은 기자

부산 학생들이 경주엑스포대공원 이용 협조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
“시설 콘텐츠 훌륭… 학생에 도움”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부산지역 학생들의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장으로 경주엑스포대공원을 적극 이용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16일 경주엑스포대공원에 따르면 하윤수 교육감은 지난 13일 경주엑스포대공원을 방문해 체험 관람시설을 둘러보고 류희림 경주엑스포대공원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하 교육감은 “경주엑스포대공원이 가진 체험 및 공연·관람시설의 콘텐츠가 훌륭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부산지역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류희림 경주엑스포대공원 대표는



지난 13일 경주엑스포대공원 접견실에서 류희림 경주엑스포대공원 대표(왼쪽)와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주엑스포대공원

“부산지역 학생들이 경주엑스포대공원 이용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업무협약(MOU)을 맺자”고 제안했다. 하 교육감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교육부, 오늘 서강대서 2028대입개편 토론회

교육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제3차 2028대입개편 전문가 토론회(포럼)를 17일 서강대학교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문가 토론회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대입개편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주제는 ‘현행 수능의 운영 현황 및 쟁점’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튜브 채널(대학어디가TV)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지난해 10월 24일 진행된 제1차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최근의 대입 개편의 성과와 효과’를, 11월 29일 제2차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수시 전형의 운영 현황 및 평가’를 다뤘다.

이날 과거 수능 출제위원장, 입학사정관, 고교 교사 등 4명의 발표자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현황 진단’ 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부여 대상기관 선정

서울시교육청, 보성학원 등 45곳

해 시행하고 있다. 대상기관으로 2021년에 학교 35교, 법인 9개를 선정했고, 2022년 학교 40교, 법인 6개를 선정 운영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3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부여 대상기관으로 보성학원 등 학교법인 7개,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 등 사립학교 38교를 선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이 16일 관내 사립학교 운영 평가를 통한 선택과 집중 감사를 위해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부여 대상기관을 발표했다.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는 우수 사학을 지원해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재정·학사 분야의 정량적 평가지표를 활용해 사학기관의 전년도 운영을 평가한 결과, 학교법인 7개(최우수 2개, 우수 5개), 사립학교 38교(최우수 9교, 우수 29교)를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기관은 전차 종합감사 연도를 고려해 연차적으로 감사 인센티브제 적용을 받게 된다. /신하은 기자